

경찰관 비위·수사공정성 의심 질타

전북경찰청이 경찰관 음주운전과 수사 기밀유출 등 각종 비위문제와 수사 공정성 의심 높은 영장기각률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전북경찰청과 전북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추석 연휴기간 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올해 전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공무원이 3명"이라며 "특히 지난 5월 전북경찰청 소속 직원의 음주운전이 불거지자 이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출근길 음주단속을 했는데 사전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올해 초에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고 동료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추격전까지 벌이는 일 있었다"면서 "이런 상황에 추격전까지 벌이면 얼마나 참파한 일이냐. 이들에 대해 일벌백계 해야한다"고도 했다.

무소속 이상만 의원도 "출근길 숙취 점검을 하려면 예고 없이 불시 점검을 해야 했다"며 "차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안내문을 보내는 것이 말이 되냐. 점검을 하려면 불시에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최원석 전북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북경찰청을 포함한 15개 경찰관서 청사 입구에서 차를 몰고 오는 직원 대상으로 (점검)했다"며 "음주운전 단속에 대해서 예고한 적도 없다. 기강 잡을 위해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사항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조치와 관련,

국회 행안위, 전북경찰청 국정감사

수사기밀 유출·높은 영장 기각률 등도 지적



최원석 전북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2023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전직 경찰서장이 내년에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경찰조사과정에서 함께 근무한 후배 경찰관이 선배를 돕는다고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전북청은 어떤 인사 조치나 직위해제가 없었다. 제 식구 감싸기를 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 7월 군산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했다가 전주지검에서 보인수사 끝에 기소된 사례가 있다"며

"20대 한국인 여성을 중간간 한 혐의의 주한미군에 대한 사건이다. 그런데 사건 수사관이 경찰서 밖에서 피해자 따로 만나서 식사하고 '남자의 70%가 외도 꿈꾼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피해자가 진정서 낸 내용이다. 수사관이 이런 발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신고를 취하할 것을 종용했다고 진술서류를 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식구 감싸기로 덮어 놓았거나 아닌 시시비비 가릴 것이냐"고도 질의했다.

이에 최 직무대행은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경중에 따라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한다. 당시에 직위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며 "해당 직원의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혐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름이 있었으며, 현재도 관련 직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다시 검토해서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현장 경찰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한) 질타는 겸허히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관 기피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수사관 기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피율이 지난 2021년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서울 경기보다도 높아 전국에서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전북경찰의 수사관들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청의 수사관

기피신청은 지난 2020년 90.3%, 2021년 93%, 2022년 93.6%에 달했다.

최 직무대행은 "우리 경찰의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고 있는 자체가 우리 수사의 공정함이 부족한 것 같다"며 "피와 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웅 의원(국민의힘)은 "전북경찰청의 영장 기각률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북청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17.7%에 달한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2위인 세종청의 경우 7.6%에 비교해 볼 때 약 3배가 넘는 수치다.

전북청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3년간 전북청은 11%, 14%, 17%로 증가했고 체포영장 기각률도 14%에서 17%로 증가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기각률이 이렇게 높은 건 본 적이 없다"면서 "이는 일시적 현상도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강제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 기각률이 이렇게 높으면 신뢰도 자체를 떨어뜨린다"면서 "이런 사안에 대한 좋은 방법은 레드팀을 만들어 영장 신청전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팀을 만들어줘야 효과를 본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 직무대행은 "영장청구에 대해 결재관자를 수사부서 책임자급으로 높이고 있다"면서 "레드팀의 역할을 수사심사관을 통해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뉴시스



전북도의회 국립의전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와 남원시의회의 특위, 남원시민 등이 24일 국회를 방문해 국립의전원 법안 통과 및 유치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남원 국립의전원 법안 즉시 통과’

도의회·남원시의회 특위 등 국회 방문

삭발식·성명서 발표 등 유치 활동 벌여

전북도의회 국립의전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24일 국회를 방문해 국립의전원 법안 통과 및 유치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이날 국회 방문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예정에 따라,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남원시의회 국립의전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와 함께 국회를 방문하여 국립의전원법 통과 및 유치 호소 활동을 벌이는 것이다.

이날 방문을 주도한 이정린 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예정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립의전원 설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며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폐교된 서남대의

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인 만큼, 의대 신설이나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도로 분리해 선결 처리돼야 한다"며 국립의전원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치적 이해 관계에서 벗어나 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최단 기간 내에 해소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인 국립의전원 우선 설립을 18만 전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특위는 이날 남원시의회 국립의전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남원시민들과 함께 국회에서 성명서 발표 및 삭발식을 진행하고 전북 출신 국회의원과 면담을 갖는 등 국립의전원 법안 통과를 위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김재훈 기자·남원=김기두기자



‘새만금 사업 정상 추진하라’ 전북도의회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북도 국정감사장이 설치된 도청 대회의실에서 국회 행안위 위원들을 상대로 ‘새만금을 살려내라’, ‘새만금 사업 정상 추진하라’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펼쳤다.

국내 치유산업 현황 점검 해외 치유산업 사례 분석

민주 안호영 의원, 산업 진흥 제언 보고서 배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재선 원주·진안·무주·장수)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실시된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치유산업의 현황과 과제, 치유산업 진흥을 위한 제언 보고서' 국정감사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발간한 정책자료집은 국내 치유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보다 먼저 치유산업 제도를 도입해 민간 주도로 인프라를 구축한 해외 치유산업 사례를 집중 분석했다. 이어 국내 치유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제언을 덧붙였다.

국내 치유산업 현황은 농촌진흥청(치유농업), 산림청(산림치유), 해양수산부(해양치유)가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치유와 산림치유의 경우 인프라

가 조성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양치유의 경우 4개 지자체에 해양치유센터가 조성 중인 상황으로 아직은 세계 산업 모두 발전 단계이다. 치유산업 진흥을 위해 들여다 본 해외 치유산업 선도국은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국가는 공공보다 민간이 산업을 주도했으며, 민간이 구축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공이 제도로 인증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는 특성이 있다.

안호영 의원은 "치유산업은 프랑스, 독일 등 해외에서 이미 경제성과 의학적 효과성을 지닌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국내 치유산업의 인프라와 국민 인식이 아직은 발전 단계에 있어 효과성의 입증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한국의 치유 자원 개발 및 활용법을 차근차근 개발해 준비한다면 농산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료집 발간 의의를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군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4일, 2023년도 제259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11월 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인 김경구 의원의 '군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우민 의원의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동완 의원의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서은식 의원의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세자 의원의 '군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한세 의원의 '군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한경복 의원의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48건의 안건이 의결된 바 있다.

이날 분회회에서 윤신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 문제 방관하는 새만금개발청 각성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어 이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서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화명중의 고밀도 확산에 대한 연구조사와 원인규명을 통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군산=김광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축! 전주매일 창간

www.flplove.or.kr

농지연금지급01 1,160,000
 315 농지연금지급02 1,160,000
 415 농지연금지급03 1,160,000
 0515 농지연금지급04 1,160,000
 0615 농지연금지급05 1,160,000
 30715 농지연금지급06 1,160,000
 30815 농지연금지급07 1,160,000
 30915 농지연금지급08 1,160,000
 130915 농지연금지급09 1,160,000
 130915 농지연금지급10 1,160,000

농지연금 신청하고~ 생활자금 매월 받고~

부모님 통장으로
매월 농지연금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힘든 농사일을 계속 해오신 우리 부모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으로 부모님의 근심을 덜어주세요.

농지연금이란? **fb** 농지은행 **kf**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는 제도로서, 경직이나 임대료 인상 추가소득도 가능하고 부부 모두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상담문의 **1577-7770**

신청자격: 65세 이상 /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